

민주당 대거 복당에 열린민주 합당투표 가결 '이재명 대통합' 마무리 수순

호남계 인사들 입당식 뒤 내달 합류... "지역서 영향 발휘 기대"
열린민주 '민주와 통합' 전당원 투표도 72.54%로 "통과"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통합'이 막바지를 향해 순항 중이다. 2016년 분당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천정배 전 의원 등 호남계 비문 인사들이 30일 대거 복당한데 이어,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의 통합을 위해 진행된 전(全) 당원 투표도 이날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천정배 유성엽 최경환 김유정 정호준 김광수 김종희 이용주 우재향 선병렬 김세웅 전 의원 등 호남계 비문 인사 12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본격적인 복당 절차는 내년 1월 3일부터 진행되지만, 호남계 인사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환영의 의미로 행사를 마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들은 1월 중순까지 복당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대선 열차'에 합류해 당내 여러 위원회나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열린민주당의 민주당과 당 대당 합당 안건에 대한 전 당원 투표는 이날 찬성 72.54%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복당과 합당 등 굵직한 대통령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지층 결속과 중도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방선거나 총선 등에서 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 이견 분출 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지만 일단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일단 '플러스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계 인사들의 복당과 관련해 "국민의당 창당 과정에서 분열되었던 세력이하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 의원들도 복당할 예정인 만큼 지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생각이 달라 탈당했었지만, 대선 때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유연하고 통합적인 후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정당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게 좋다"며 "큰 틀에서 정책 방향성이 같다면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좁혀가는 게 건강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복당 의원들과) 경선 경쟁 관계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다음 출마 문제는 민심의 향배에 달린 것"이라며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통합이 중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하나하나 더해 가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왼쪽)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오른쪽)에게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과 관련,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법사위 '공수처 통신조회' 정면 충돌

야 "대선개입 의지 명백"
여 "윤 총장때 280만 사찰"

여야가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으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수처가 불법 사찰을 하며 대선에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찰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검찰의 통신조회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 "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역공을 폈다.

우선 윤 후보의 최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김용 정점식 의원을 제외한 다른 야당 의원들은 고발사주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털었나. 과도하지 않은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권 의원은 "아빠, 처장!"이라고 고성을 내기도 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공수처가 야당, 언론, 민간인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무분별한 사찰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 당 의원에 대해서는 10월 13일,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때에 통신조회를 했는데, 대선 개입 의지가 명백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사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영배 의원은 "(야당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만 280만 국민들이 사찰을 당한 셈"이라며 "야당은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기들도 통신조회를 해놓고 이제 와서 사찰이라는 것인가. 이는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로 축발된 논란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부인인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한 통신조회와 관련, "윤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회였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였다"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예비내각 생각중, 통합정부도"

"책임총리제, 최대한 활용"
통신조회 사찰 아냐"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0일 집권에 대비한 '새도 캐비닛(예비 내각)'과 관련해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일은 없다"면서도 "어떤 부분이 어떤 분이 가능한 인재인지, 그곳도 복수로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발하면 공식 제공 의사 표시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협치정부, 통합정부, 실용내각 등으로 가려 한다"며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연합해낼 수 있다면 훨씬 낫지 않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선거 과정에서의 연합' 및 예비내각 언급은 송영길 대표가 최근 "김동연, 안철수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이 후보는 또한 책임총리제와 관련, "헌법에 있는 제도와 법률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하는 입

장"이라며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공개적·체계적으로 드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 원칙과 관련해서도 "변방의 아웃사이더로 출발해, 정치 공동체로서의 핵심 측근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라며 "역량 중심으로 먼저 판단하겠다.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 개편 방안으로는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상관 노릇을 해 다른 부처의 자율성·창의성이 훼손된다"며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광범위한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으나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는 않는다"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야당만 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하더라도) 선택은 똑같은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직원들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더 철저한 조치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즉시 특검하자고 했다"며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해당 부분은 빼고 하는 식이면 되겠느냐"고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박근혜 건강 회복되면 찾아뵙고 싶다"

이틀째 TK 일정 이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구·경북 일정 이틀차인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건강이 회복되시면 찾아뵙고 싶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대구 방문은 31일 0시를 기해 석방되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맞물려 주목 받았다. 윤 후보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수사를 이끌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세가 강한 대구에서 내놓는 정치적 메시지에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일단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 관련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24일 사면 발표 당일),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등 원론적인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윤 후보는 전날 울산·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대어 비판에 집중할 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 이런 '신중 모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론의 민감성 때문이다. 중도층 눈치를 보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해 박 전 대통령과 선을 긋거나, 반대로 강경 보수층을 의식해 탄핵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것 모두 윤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박근혜 수사 검사'란 이력을 알면서도 국민과 당원들이 윤 후보를 대선 후보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탄핵의 강'을 다시 건너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선대위 내부의 입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경북도당에서 15개 친박(친 박근혜) 단체들과 비공개 차담도 했다. /연합뉴스

민주, 이재명 아들 의혹 제기 국힘 의원 66명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두 아들에 대한 대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이 후보의 장남이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에서 '삼수생'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는지를 전제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후보 장남은 2012학

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때 '재수생'으로 응시하였고 응시 전형도 '수시 특별전형'이 아니라 수능성적 기준 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66명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 아들의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차원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고려대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가 8시간 만에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